

[제1부]

충청남도 갈등현안 동향과 해결방향 세미나

◆ 목 차 ◆

-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Ⅰ)
-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Ⅱ)
-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Ⅲ)

Ⅰ.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Ⅰ)

2010. 12. 29.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Ⅰ)

-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안 현장조사 -

최한규 박사(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위원)
전오진 박사(호서대 사회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1.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2. 금강하구둑 기수역복원 관련
3.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관련
4.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관련
5. L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6. 천안직산읍 국도1호선교차로 설치
7.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관련
8. 천안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9. 서산국방과학연구소 증설관련

1.1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 개요

- KTX역명칭갈등후(아산시행정구역) 2003년 천안택시업계 공동영업 요구
- 아산택시업계 : 천안아산 전체 통합, 천안 - 부분통합 주장
- 충남도의 조정노력에도 갈등 지속, 2010년 11월 건교부의 직권 조정 절차 중
- ➡ 정부간갈등(기초간 갈등), 관할구역조정 갈등, 갈등 해방기

■ 진행경과

- 2003.12. 2 천안택시업계 공동영업/택시승강장설치요구(충남도)
- 2004.4. 2 천안과 아산택시업계 물리적 충돌(KTX천안아산역)
- 2004. 4. 6 조정회의(충남도)
- 2009. 7. 20 충남-천안-아산 실무자 간담회(아산시관할구역)
- 2010. 11. 1 국토부-천안-아산 관계자 간담회(공동사업구역/현행유지)

3

1.2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정부간 갈등(기초-기초), 관할구역 갈등
- (쟁점) KTX 행정구역VS일부포함, 이용객편의, 부분통합/전체통합,
- [이해당사자] 아산시(택시업계)-천안시(택시업계)-충남도-국토부
- ➡ 도시자 조정권/ 국토부장관 조정권 => 제3자에 의한 관할 갈등 타결임박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양측 주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시 청취, 객관적 자료분석 -> 대화와 토론
- 충남도의 조정안 발전된 형태로 조정될가능성 높음(부분통합->전체통합)
- 일방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협의
- ➡ 대화와 토론 -> 조정안에 대한 순응

4

1. 3.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 해결 방안

- 통합추진위원회, 조정위원회 협력능력 미숙
- 양방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조정안 제시
- 조정이후에 상생협력방안 마련

➡ (조정안) KTX역 통합, 천안일부지역 아산영업가능, 중기적으로 전체통합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아산과 천안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 공동사업 구상
- 양지방정부의 사업자 설득과 이해

5

1. 4.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 관련 사진



6

2. 1.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 개요

- 1990년 금강하구둑 설치 - 농공업용수 확보, 홍수예방 1841m
 - 2009년 서천군 '금강살리기종합계획' -기수역 복원 공식화(200m 철거)
 - 군산시 농공업용수 확보곤란, 홍수때 바닷물유입, 저지대 범람 등 반대
- ➡ 정부간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4대강 사업 미포함(갈등 잠재)

■ 진행경과

- 2009. 1.30 충남발전연구원 금강하구 기수역 복원 방안 제시
- 2009. 2. 4. 서천군 금강하구 기수역 복원 공식화
- 2009. 3. 13 군산시 반대 입장 기자회견
- 2009. 3. 25 금강하구호 관련 간담회(국토부-서천군-군산시-충남-전북)
- 2009. 6. 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국토부) 금강하구둑 수질개선 미포함
- 2010. 10. 2 금강하구둑 개선사업 채택(충남도) -> 2010.11.16용역(국토부)

7

2. 2.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정부간 갈등(기초-기초/광역-광역), 지역개발갈등, 환경분쟁
 - (쟁점) 농공용수/담수사용불가, 수질개선/효용의문, 홍수예방-의문, 환경개선
 - (이해관계자) 서천군-군산시-충남도-전북도-국토부-농림부
- ➡ 갈등쟁점 : 해수유통의 효과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해수유통(기수역복원) 효과성에 대한 쟁점 -> 전문가 영역
 - 양 지방정부간의 협의체를 통한 문제해결
 - 해수유통시 대안 탐색 작업
- ➡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 및 전문가 포함의 협의체 구성

8

2. 3.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갈등이해당자의 협의기구 : 전문가 그룹 참여
- 기수역복원 효과에 대한 분석
- 농업업용수 확보 대안 탐색
- ➡ 기관간 협의체 구성으로 합리적 대안 제시 가능(전문가영역)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이해당자의 협의기구 구성
- 전문가를 통한 대안 탐색.

9

2. 4.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10

3. 1.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 관련 갈등

■ 개요

-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일원 공주역 설치 2009년 착공, 2014년 완공목표
- 전체 1,520m 중 220m 제외 토공구조물 건설 - 주민들이 반발
- 18m 의 토공구조물로 마을 단절및 조망권 차단 -> 교량형 건설 주장
- ➡ 주민-시공시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갈등 중폭기(일부협인)

■ 진행경과

- 2006. 4. 28 남공주역 신설(soc 건설 추진 위원회)
- 2007. 6. 17 공주시 이인면 신영2리 일원 설치 확정
- 2009. 7. 8 주민설명회 : 지역주민 교량화 요구
- 2010. 9. 25 간담회(충남지사-철도시설공단-주민) 교량400, 도로확장
- 2010. 9. 30 지역주민 300여명 시위

11

3. 2.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정부간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 (쟁점) 성토공사V교량화, 소하천이설VS 휴식공간, 도로확장, 역세권 개발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시설공단-건교부(기재부)-공주시-충남도
- ➡ 협의체 구성 후 협의중이며 교량화 부분만 미합의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주민 신뢰 회복
- 민관협력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
- 대화 와 설득 필요
- ➡ 협의체 구성하여 대화와 설득 지속하고 투명한 절차로 주민 신뢰회복

12

3. 3.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 관련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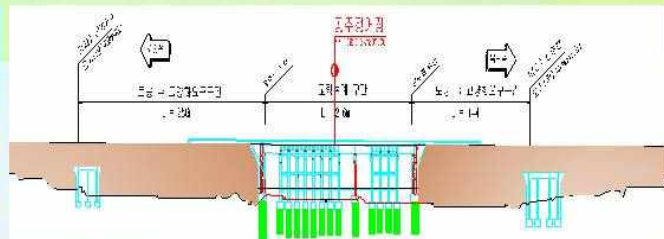
■ 해결 방안

- 철도노반 교량화 요구가 1차 쟁점이며 휴식공간확보, 진입로확장 부수쟁점
 - 지역이해관계자 포함하는 협의체구성 및 운영내실화
 -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 및 간접적인 유인책 마련
- ➡ 대화와 토론으로 주민 이해와 설득

13

3. 4.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14

4.1.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 개요

- 충남도 예산군 경인주물공단 조합 MOU체결 23개기업 상몽리일원 공단설립
- 민간개발 방식 481천m² 667억, 2013년 완공
- 지역주민 - 주물공장으로 분진, 악취로 낙농업피해, 주민건강 위해 공단
- ➡ 산업단지의 인식차이: 주민과 정부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해당, 갈등증폭기

■ 진행경과

- 2009. 11. 23. 경인주물공단조합 + 충남도 + 예산군 MOU 체결
- 2010. 7. 28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2010. 8. 12. 주민설명회 무산(예산 고덕주민, 당진군 면천주민 반대)
- 2010. 9. 1 반대대책위 충남도 항의방문, 9. 30. 예산군청앞 시위
- 2010. 11. 3. 당진군 의회 조성 반대 결의문 채택.

15

4.2.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과 정부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환경관련갈등
- (쟁점) 신소재VS주물, 친환경시설설치VS환경오염, 경제활성VS 피해유발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찬반)-예산군-산업단지(주)-당진군(회)-충남도
- ➡ 기피시설입주와 관련한 갈등, 주민과 기관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인지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기피시설입지와 관련 갈등으로 주민의 이해와 설득 필요
- 주민의 행정기관, 상호 불신 만연 -> 주민 공동체 붕괴 회복
- 주민과 협의체구성 - 주민참여방안 마련(공해감시단운영, 협약채결)
- ➡ 주민과 협의체구성, 상호협약채결 -> 불신 완화

16

4.3.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이해당사자간 협의체구성, 대화통로 개설
 - 이해당사자간 협약체결 : 환경감시 모니터링단 구성
 - 주민생활지원방안 및 주역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
- ➡ 협의체 구성으로 상호불신을 완화 하고 협력 체결로 해결 노력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협의체 구성 지원
- 협약 체결 및 이행: 공해모니터링단, 협약 체결

17

4.4.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18

5.1. N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

■ 개요

- 아산신도시 2단계 533.7만평 중 1차 에 대한 보상은 현재 진행중 이며,
 - 2차 탕정지구 377.3만평 에 대해 NH공사와 국토부가 전면 재검토
 - 지역주민들이 16년간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원안추진 요구
- ➡ 주민과 기관간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갈등 중폭

■ 진행경과

- 2005. 12.29 탕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건교부)
- 2009. 12. 1 아산신도시 2단계 1, 2차 지구 분리, 1차지구 실시계획승인
- 2010. 9. 10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전면재검토(건교부)
- 2010. 9. 15 신도시대책위 현수막 게시 및 손해배상 소송 전개 등 결의
- 2010. 10. 11 아산시 건교부 건의 (약 146만평 개발 지속 등)

19

5.2. N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기관간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갈등 중폭기
 - (쟁점) 원안추진 VS 사업취소, 지구해제 VS 사업연기, 피해보상
 - (이해당사자) 주민-NH - 국토부- 아산시- 충남도
- ➡ 주민과 기관간 갈등, 주민 재산권 침해, 충남발전계획수정 등 후속파급효과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주민의 대 행정기관 불신 만연 -> 민·민 갈등으로 지역공동체 붕괴 우려
 - 적절한 대안 사업 추진 및 주민 안정화 노력
 - 오랜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협의체구성 -> 간접적 보상 노력
- ➡ 적절한 대안 사업 구성으로 주민 안정화 와 피해 보상

20

5.3. N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아산시의 의견 반영 되도록 노력
- 주민 피해 보상 대책(간접보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관련 사업 지속 추진 노력(아산시, 충남도의 사업 참여)
- ➡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과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민관 협력으로 협의체 구성 : 피해 보상 및 후속 사업 지속 협의
- 후속 사업에 영향 주지 않도록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 노력

21

5.4. N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22

6.1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교차로 설치 갈등

■ 개요

- 2005년 충남TP조성, 업체 100여개 입주, 직산사거리 상습정체, 불법유턴
 - 상습정체로 교통 받던 마을 주민과 충남 TP 직원들이 교차로 설치 탄원
 - 대전국토관리청은 예산문제와 신호등 설치 이격 550m 이내 라며 난색
- ➡ 주민과 기관간 갈등, 시설설치 관련 갈등, 갈등 해빙단계

■ 진행경과

- 2006. 4. 19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 2010. 8. 11 직상읍이장협의회 충남TP 진입로 교차로 설치 탄원서제출(국관)
- 2010. 8. 17 대전국토관리청 -> 예산관리사무소 이첩 -> 불가 입장전달
- 2010. 9. 3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조건부가결)

23

6.2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교차로 설치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과 기관간 갈등, 시설물 설치 갈등, 갈등 해빙기
 - (쟁점) 주민 교차 설치 와 법적으로 설치 불가 입장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 국토관리청+천안시+경찰서
- ➡ 이해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 가능한 사안.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쟁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인식 공유로 갈등해결 가능
- 예산문제와 법적 검토에 의해서 해결할 사안.

➡ 당사자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 가능

24

6.3.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교차로 설치 갈등

■ 해결 방안

- 성환순환도로 건설로 진입로 혼잡 해결 가능(갈등 해결)

➡ 기관과 주민간의 대화와 설득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기관 협의로 예산 확보

25

6.4.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교차로 설치 갈등

■ 관련 사진



26

7.1.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

■ 개요

-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가 사업 일환으로 신대저수지 독높이기사업 시행
- 기존 독 보다 3.5m 높이고 102억 투입 2015년까지 완공 목표
- 주민들은 가뭄이나 홍수피해없고, 면소재지로 독붕괴위험 등 피해 호소
- ➡ 주민과 기관의 갈등으로 지역개발 관련 갈등, 대화와 설득

■ 진행경과

- 2010. 1. 15. 한국농어촌공사 신대저수지 독높이기 사업 예정지 제출
- 2010. 6. 29. 환경성 검토 협의회 의결 수렴
- 2010. 7. 8. 사전환경성 검토조서 제출 및 주민공람 시작
- 2010. 7. 26 주민설명회 - 주민 축조반대, 준설 및 퇴적토 제거 사용 요구
- 2010. 11. 독높이기 사업 토목공사 입찰, 보상 협의

27

7.2.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과 기관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수자원개발, 갈등 해빙기
- (쟁점) 농업용수확보 VS 충분, 생태환경개선, 주민불안, 주민피해보상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농어촌공사-청양군
- ➡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 후 공사 시작, 주민 설득 미흡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독 아래 주민(면소재지) 과 독 위 주민간 온도차이 => 계획단계 주민참여:
- 주민설득 작업 후 사업 시행
- 주민의 불안감 해소 와 주민생활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협의
- ➡ 당사자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 가능

28

7.3.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 : 이해와 설득
- 주민생활지원과 대화와 협의의 장 마련

➡ 기관과 주민간의 대화와 설득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29

7.4.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30

8.1.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관련 갈등

■ 개요

- 천안시 풍세면 풍세산업단지 조성 2011년까지 완공 계획
 - 한전이 산업단지에 전력공급하기 위해 3.63km 154kv 풍세분기 송전설치
 - 송전선로 지나는 지역주민과 한전간 경과지 와 설치 방법 놓고 갈등 대립
- ➡ 주민과 기관간 갈등,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한 갈등, 갈등중복기

■ 진행경과

- 2008. 6. 1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전→지경부)
- 2008. 9. 29 주민설명회 개최. 풍세면 주민 경과지 변경, 전구간 지중화요구
- 2009. 9. 10 실무회의(천안시+한전) 과다 사업비부담, 타기관협의 등 거절
- 2009. 10. 8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요구 미반영 불만 주민 퇴장 무산.
- 2010. 9. 1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지경부) - 보상협의 중

31

8.2.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비선호시설설치와 관련 갈등, 주민과 기관간 갈등, 주민간 이해갈등
 - (쟁점) 선로변경VS 최적지, 지중화 VS 경제성, 재산가치하락 VS 마을지원사업
 - [이해관계자] 주민-한전-천안시-지경부
- ➡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한 갈등으로 주민의 이해와 설득(공익사업) 협의체구성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기피시설설치 와 관련한 갈등으로 협의체구성 해결
 - 재산가치 하락 등 마을지원사업 등 간접적인 보상 협의 추진
- ➡ 당사자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 가능

32

8.3.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주민과 이해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이해와 설득, 모두 논의
- 재산가치 하락 등 친환경 송전철탑 시공 권장 및 마을 숙원사업 지원 등 협의

➡ 기관과 주민간의 대화와 타협 방안 마련

33

8.4.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34

9.1.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증설 관련 갈등

■ 개요

- 국방과학 연구소 2013년까지 기지1리 17만m² 연구소 증설 계획
 - 기지1리 42가구 중 약 30여가구만 수용하고 나머지 12가구 미수용
 - 비수용 주민들 나머지 가구수용해줄 것 요구하며 갈등 발생
- ➡ 주민과 중앙정부간 갈등(기관간), 지역개발관련 갈등, 이해갈등, 갈등증폭기

■ 진행경과

- 2010. 4. 7. 국방과학연구소 제5시험장 증설 관련 용역 발주
- 2010. 6 기지리 토지 측량 시작 (주민 인지)
- 2010. 7. 10 지역주민 토지측량 거부, 서산시청 과 국방과학연구소 항의방문
- 2010. 8. 29 주민들 마을 전체수용 진정서 제출
- 2010. 10. 2 마을 전체 수용 현수막 게시, 국방과학연구소 수용불가 입장

35

9.2.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증설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과 중앙정부간(기관간) 갈등, 지역개발과 관련 갈등, 갈등잠재기
 - (쟁점) 주민피해감수 여부, 전체수용VS부분수용, 보상의필요성
 - [이해관계자] 비수용주민-국방과학연구소(국방부)-서산시
- ➡ 주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패배, 주민이해와 설득 및 보상 협의.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갈등조정기구
- 지방정부의 중재노력 절실히 요구됨.

➡ 지방정부의 갈등해결 중재 노력 요구(대화와 타협)

36

9.3.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중설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지방정부(기초)의 갈등중재노력: 협의체 구성 및 대화창구 개설
- 주민 피해 보상 (간접) 및 주민지원사업 등 논의

➡ 지방정부의 갈등 중재 노력 (대화완 설득)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기관 협의로 예산 확보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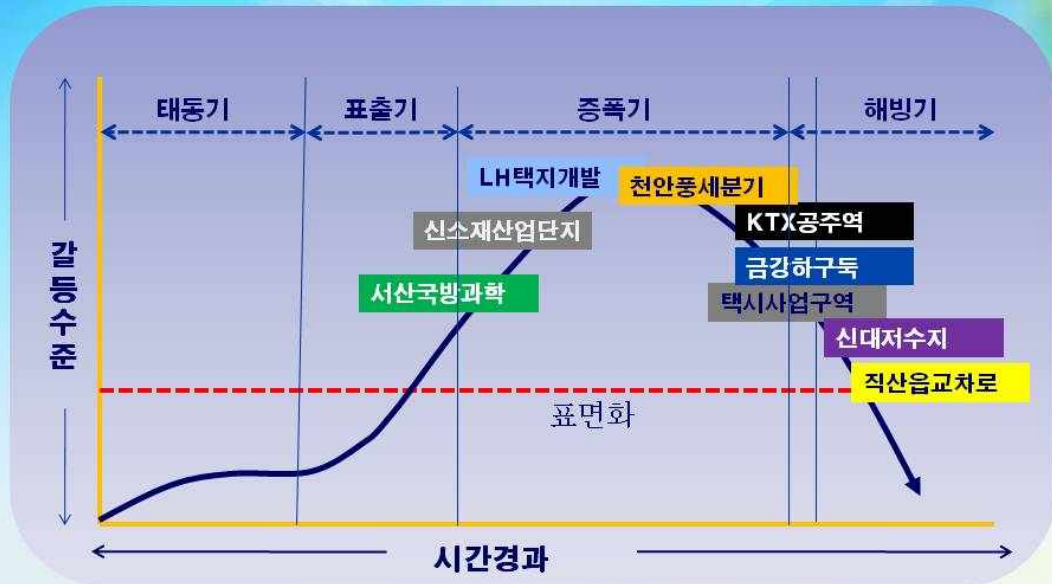
9.4.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중설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38

갈등사례 갈등 수준



II.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II)

2010. 12. 29.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Ⅱ)

-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안 현장조사 -

신기원 교수(신성대학)

목 차

1. 해상경계 및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갈등
2. 당진-아산 산업기지 항만준설 관련 갈등
3. 동부건설의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갈등
4. 태안 광업권 출원관련 갈등
5.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관련 갈등

1. 해상경계 및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갈등



3

■ 개요

- 2004년 9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판결에 의해 해상도계를 인정하고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의 당진군 자치권 인정
-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신규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분쟁조정신청

■ 진행경과

- 2009년 7월 신규매립지 당진군토지로 신규 등록
- 2010년 2월 해당토지 등록은 무효로 행안부장관이 귀속단체결정해야 한다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
- 2010년 5월과 6월 추가 신규매립지 당진군토지로 신규 등록

4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행정관할구역 분쟁으로 현재 진행중임
- 해상도계 및 관할구역에 대한 법규 미비
- 자치단체간 상호 협상과 의견 공유를 통한 해결방식이 아닌 제3자를 통한 해결방식으로 분쟁지속 기간 장기화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평택당진항의 개발 목적 검토
- 호혜평등에 입각한 상호동반자적 협력체계구축 필요
 -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
 -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5

■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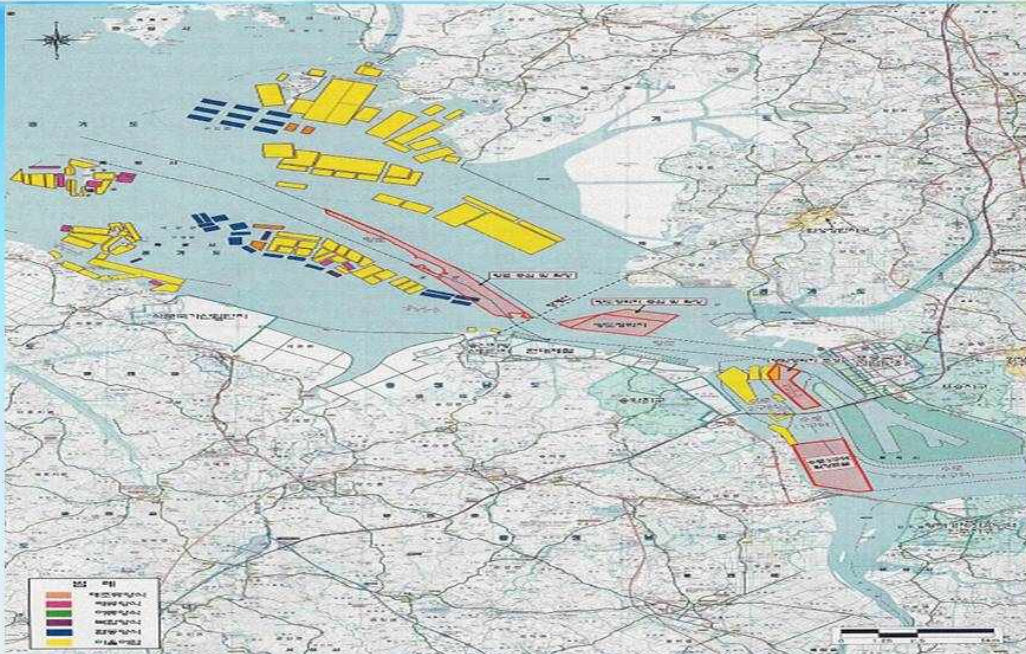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올바른 결정 및 수용
- 여론 및 정치인 등을 통한 우리측 주장 타당성 행정안전부에 전달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충남도에 항만관련 기관 신설
- 해양(항만)관련 공무원 보충 및 전문성 제고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매립지 분쟁 해소

6

2. 당진-아산 산업기지 항만준설 관련 갈등



7

■ 개요

- 아산산업기지 항만개발사업의 수정된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과 갈등 발생
-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하다 보니 의혹 증폭

■ 진행경과

- 2010년 7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당진군으로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송부
- 2010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반발
- 2010년 11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계획서 환경부에 제출

8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사업허가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지역 주민간의 갈등
- 당진군은 권한이 없고 협의의견만 제출하여 갈등해결에 한계
-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 표출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현실타당성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주민들의 오해 불식
- 주민들의 불만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설득과정 필요
- 1회성 민원으로 파악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의견 전달 및 반영 등으로 잠재된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 필요

9

■ 해결 방안

-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환경부의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해당지역도 인접한 평택시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개발계획 필요
-연육교의 조속한 착공
- 삼교천 퇴적층이 여름철 수문개방 시 서해대교주변에 쌓여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

10

3. 동부건설의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갈등



11



12



13

■ 개요

- 동부건설이 동부제철 증설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 동부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 당진군과 동부건설 및 지역주민들간 갈등이 복합된 양상
- 발전소건설계획이 확정될 경우 다양한 상황 전개 예견

■ 진행경과

- 2009년 12월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설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 검토 신청서 제출
- 2010년 8월 당진군 및 당진군의회 건설 반대
-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14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대기오염배출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환경시설 관련 갈등
- 당진군과 민간기업의 갈등 및 주민간 갈등 이 복합적으로 연계
- 결정권 없는 자치단체가 군정책방향과 관련 반대의견 표시
- 반대를 통해서 얻는 이익 존재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당진군과 동부건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
- 추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 모색
- 왜목마을이 관광지로서 갖는 가치 보존

15

■ 해결 방안

- 허가와 불허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계획 마련
-점점을 찾으려는 노력 필요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투명하고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 화력발전소 주변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기준 새로 정함
- 자치단체에게 공모하여 전력사업을 신청하는 방안 모색
- 정치지도자들의 포퓰리즘 경계

16

4. 태안 광업권 출원관련 갈등



17



18

■ 개요

- 외지에거주하는 업자가 광업권을 출원하여 현지주민들이 반발하여 생긴 갈등으로 현재 진행중임
- 일부 지역의 경우 20년전 광업권출원으로 소송에 시달리는 등 피해의식 강함
- 광업권 설정이 갖는 문제점 여러 지역에서 제기

■ 진행경과

- 2010년 7월 태안군으로 광업권설정 출원 공익협의 통보
- 2010년 7-8월 지역주민, 태안군의회 반대의견 지식경제부에 전달
- 2010년 12월 현재 출원된 4개 지적 중 1개는 불허, 3건은 실지조사 대기 중으로 내년 초 실시 예정

19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광업권출원인과 해당지역간 갈등으로 민민간 갈등
- 현재 진행중인 갈등으로 광업권설정의 불합리한 측면에서 야기
- 내년 초 실지조사를 통해서 허가로 결정될 경우 제2의 안면도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불허로 결정되기 위한 방안 마련
-광업등록사무소 재방문 및 실지조사 시 의견 개진
- 광업법 재개정

20

■ 해결 방안

- 광업등록사무소의 불허 결정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광업법의 내용 검토 및 불합리한 내용 개정
- 광업권을 둘러싼 행정적 피해 및 부조리사례 수집 및 개선

21

5.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



22



23

■ 개요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서부발전의 이해가 맞아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반 이행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갈등
- 건설을 반대하는 서산시와 서부발전간 갈등, 서부발전과 반대주민간 갈등,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의 갈등이 복합된 사안으로 현재 진행중임

■ 진행경과

- 2007년 9월 가로림조력발전(주)설립
- 2007년 12월 해양수산부 가로림만 가치평가: 개발 보다 보존
- 2008년-현재 찬성과 반대 의사 표명
- 2010년 10월-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24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정부의 이율배반성이 내포된 갈등
- 환경보존과 자원개발이란 양상의 갈등-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공익의 갈등
-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려는 비민주적 행태
- 자치단체의 권한 미약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충남도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 모색
-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최대한 현실 반영

25

■ 해결 방안

- 충남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로림만에 교량 건설
- 주민들의 반대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 필요
-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개념 재정립
- 다양한 방식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
- 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26

Ⅲ. 충남 지역갈등과 해법찾기(Ⅲ)

2010. 12. 29.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Ⅲ)

-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안 현장조사 -

이준건 박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갈등조정연구소장)

목 차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2. 금산 우리농 광산개발사업
3. 헤리티지 마운트 컨트리클럽(전, 논산 나이스
골프장
4. 상생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 개 요

- 무궁화공원랜드가 충청남도에 장묘공원 사업 인·허가로 지역주민 갈등 발생
- 지역주민 장묘사업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 등 강하게 반발
- 논산시 중재 조정노력 불구 지역주민 사업자와의 대화가 원천적으로 단절
- 지역주민 내년 4~5월 개최 예정인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기대

3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 진행경과

- 08.12. 3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 설립허가 (충청남도)
- 09. 2. 2 반대추진위 벌곡환경보호회 공원묘지설치허가 및 법인허가 원인 무효 소송의 건 진정서 제출
- 09. 5.14 광산 김씨 문경공파 주최 논산시청 앞 집회실시
- 10. 5.19 원불교 공동묘지 설치반대 집회 (양산리, 한삼천리 주민 200명)
- 10. 7.26 원불교 공동묘지 설치반대 집회 (벌곡면 주민 300명)
- 10. 8. 3 반대추진위 논산 시의회 방문 (반대서명서 전달)
논산시의회 공동묘지 진행과정 및 현황 의견청취
- 10. 8.12 충청남도지사 면담
- 10.11.25 논산시장 면담
- 10.12월 논산시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계획을 추진 중 그러나 주민측 주민 설명회 개최를 원천적 봉쇄

4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갈등정도 : 갈등 증폭기 (분출기)
- 갈등성격 :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 무궁화공원묘원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오해
- 사업자와 지역주민 상호 간 불신으로 대화 단절
- 별곡발전협의회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 시도 실패
- 전농연 논산지부 개입으로 이해 당사자→3자간으로 확대
- 인근 석산개발(골재채취장)로 10여년 넘게 고통 경험(연산방향 4km)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입지로 분진 도로파손 등 불이익 경험
- 사업규모 견해차 : 실제 295,070m² (8만9천여평)
주민 2,750,000m² (83만평 규모 주장)
- 주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11, 5월)에 대한 부결 기대

5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비선호 시설 입지에 관한 학습 및 이해와 설득 필요
- 사업내용 및 차후 사업 확장(화장장, 매장묘지 등) 계획에 대한 담보
-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주적 파트너십
- 전문성 및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된 제3자의 중재 조정 노력(충남상생갈등포럼)
 - 각종 세미나 및 대화의 장 마련
 - 선진지 견학 및 사례 학습으로 상호간 이해 확장
- 전농연 논산지부 등의 개입 최소화, 당사자간 자율적 협의 창구 확보
(수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른 대안 모색
- 지역발전기금(10억원)규모 및 공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 접근
 - 기금 사용처에 대한 명시, 활용방안 설정 검토 등

6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 해결 방안

- 왜곡된 정보 올바른 이해 설득 및 사업설명회 조기 개최
- 주민대표, 사업자, 충청남도, 논산시, 의회, 농민회,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좌담회 및 세미나 개최
- 선진지 견학 통해 주민수용성 확보 및 상생협력 방안 마련
- 현실적 피해 보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사업추진계획 내용, 보상, 사후보장)
- 유희부지 화장장, 생장 등 추가 사업 확장 않겠다는 약속
 - 법적 이행 담보로 오해불식(공증)
- 지역발전협의회 해체 후 전문가그룹 및 포럼 의뢰 공정하고 투명하게 문제 해결 시스템 구축
- 혐오시설(기피시설, 비선호시설)이 아닌 사회공익시설 인식 전환
- 사업 계획단계 시공 및 완공까지 주민감시제도 약속

7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충청남도, 논산시 화장장 매장시설 등 추가사업 불허 약속
- 각종 연구시설 및 복합·편의시설(PIMBY) 등에 대한 유치 지원
- 벌곡 낙후지역의 예산 우선배정으로 균형발전 및 현안사업 지원
- 인근 석산개발사업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사업 만료 후 연장 불허 및 자연환경 원상 복구책 마련 (상대적 보상 제공)
- 청정지역의 농특산물 이미지 훼손에 따른 농가소득 지원방안 (농외소득)
- 남부권포럼 등 전문가와 연계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문제해결 방안 강구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이후 대안 모색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실시(금강환경청)

8

2. 금산 우리농 광산개발사업

■ 개 요

- 토자이홀딩스 충청남도에 우리농광산 개발 사업허가 신청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사업 반대
- 충청남도의 사업신청 인가 불허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당성을 제기 지경부 광업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 사업자측 행정심판 청구에 나서자 지역주민 국민권익위원회 소원 신청 등 맞대응으로 갈등 확산
- 최근 중부대 공식 반대 표명 및 상하류지역인 금산군의회, 대전광역시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의회 가세 최근 옥천군의회도 참여
- 12월8일 대전 지역의회 의장단 현장 방문 우리농개발에 대한 성명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

9

2. 금산 우리농 광산개발사업

■ 진행경과

- 09. 3.30 채광계획 인가신청
- 09. 5.21 주민 탄원서 접수
- 10. 1.20 지역주민(17명) 충청남도의회(박찬중의원) 방문
결사반대 의사전달 및 탄원서 제출
- 10. 2. 3/2. 9 금산군의회, 금산군청, 목소리, 수영3리주민 탄원서 제출
- 10. 2.19 이장단 충청남도방문 광산개발 반대서명 탄원서 제출
- 10. 3. 3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충청남도)
- 10. 5.31 사업자 행정심판청구(이의신청) - 지식경제부
- 10. 8.21 금산군 기관장 비상대책위원구성 복수면 비상대책위 다락원 일원
우리농광산 반대 서명운동
- 10. 9.28 군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지경부 및 국회방문
- 10. 11. 7 금산군의회 대전지역 5개구 의회방문 광산개발 반대 협조
- 10. 11.28 충남도의회 의장단 광산개발 반대 결의 및 건의서 지경부 제출
- 11. 6월 중 광업조정위원회 우리농관련 행정심판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현지방문 주민청취

10

2.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사업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갈등정도 : 갈등 증폭기(분출기)
- 갈등성격 : 지역주민, 사업자, 의회 등
- 이해당사자 주민은 물론 충남도의회, 대전광역시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 충북 옥천군의회, 중부대학교 등 다자간으로 확대
- 강(江)연결 지역주민 건강권 위협 반발(금산~대전유등천~옥천군~대청댐)
- 인근에 사찰 건립 공사 과정 인체 유해한 우라늄 및 황 성분이 대거 검출공사를 중단 사례로 위험성에 대한 주민 인식(2008년 채굴된 돌에서 유해성분 잔재 육안 확인)
- 개발예정지 임야 개인 소유자 최근 언론 인터뷰(유00씨)
광산개발 반대 공식 입장 표명(충청투데이 10년12월17일자 보도)
- 목소리 일부 주민 사업자 제시 안 조건부 찬성

11

2.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사업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광산 개발의 주체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가 나서야 함
- 중앙정부, 지자체, 의회 등이 참여하는 대승적 차원의 협의체 구성
- 외국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우라늄광산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민·관·산·학·연의 참여 협의체 마련 (전례가 없는 사업임)
- 사무실 현지(금산) 이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신뢰확보)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사업자 : 보상찬성 주민1인당 300만원 지급)

12

2.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사업

■ 해결 방안

-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설득 및 유해물질 분석자료 투명 공개
금산 : 0,038mg (경제성 없음), 남아공, 러시아 : 0,3mg (경제성)
- 우라늄 위험도에 대한 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인식 재정립
-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 확보 위한 지속적 노력
- 선진 외국의 우라늄 개발 성공 사례 및 학습 기회 등을 통해 사전에 정보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 (원자력전문가 초청)
- 개발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하고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추락에 대한 보상책 마련

13

2.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사업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차원 사업의 진정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선진 외국의 사례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한 매뉴얼 확보
-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자세와 다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화장구 마련

14

3. 헤리티지 마운트 컨트리클럽(前, 논산 나이스골프장)

■ 개 요

- 골프장건설 허가과정에서 임목축적조사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조사되었는데도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주장, 지역주민이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갈등 발생
- 임목축적조사서에 대한 행정당국의 불신으로 지역주민과 전농연 논산지부가 가세하였으며 최초 사업자의 부도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마저 의심 받음
-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자 지역주민 대전지방법원에 도시계획시설 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3차례 심리를 마치고 2011년 1월 12일 최종 선고 예정

15

3. 헤리티지 마운트 컨트리클럽(前, 논산 나이스골프장)

■ 진행경과

- 08. 4.30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골프장) 변경결정 고시
- 09. 2.27 도시계획시설사업 (체육시설/골프장) 실시인가 고시
*09. 3월 논산 나이스골프장 부도 → (주)더블유엠건설 매입
- 10. 2.19 청문 실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납 및 산지복구비 미예치, 보증 이행금 미예치
- 10. 6. 4 도시계획시설 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 10. 10.27 3차 변론 (대전지방법원)
- 11. 1.12 최종 선고 예정

16

3. 헤리티지 마운트 컨트리클럽(前, 논산 나이스골프장)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갈등정도 : 해소기 또는 갈등 재발
- 갈등성격 : 지역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 임목축적조사서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결심 공판결정에 따라 새로운 갈등 국면이 전개될 수 있음
- 사업자 법원의 결정이 유리하게 나올 경우 공사 강행 입장
- 지역주민 골프장 건설부지 내 일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집단 행동 불사 움직임
- 전농연 논산지부와 연대 항소 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 다분함

17

3. 헤리티지 마운트 컨트리클럽(前, 논산 나이스골프장)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상호 상생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 사업자 잔여 토지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및 지역주민 위로
-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종식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 해결 방안

- 충남(남부권)포럼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 상호 합의에 의한 보상을 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지역발전기금, 현실적인 토지보상, 수질환경 문제 등의 성의 있는 이행

18

4. 상생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 개 요

- 증산도 유지재단에서 청소년수련원시설 건립, 추진 과정에서 환경을 크게 해칠 것을 우려한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 인근 유사한 수련원시설 들어선 후 지하수 고갈로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 겪은 피해경험 상기하며 반대
- 인근 마을 주민들은 특용작물 재배하고 있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사업 반대
- 생활 오·폐수 배출에 따른 오염원 증가와 주거환경이 훼손되는 한편 지역의 이미지 실추 이로 인한 지가하락 우려

19

4. 상생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 진행경과

- 10. 7.28 주민설명회시 주민사업 반대의견 제출(석종3리 마을회관)
- 10. 8.27 주민 탄원서 제출 - 청소년 수련원시설 조성 반대
- 10. 9. 2 민원(탄원서)에 대한 주민설명회(석종3리 마을회관)
- 10. 9. 3 민원발생에 따른 조치계획수립 제출(논산시→증산도 유지재단)
- 10. 9.10 주민 고충민원처리 결과 회신
[민원내용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반영 예정]
- 10.11.1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최종시설결정)
- 11. 2월 중 실시계획 인가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설치허가 예정
- 2015. 준공 예정

20

4. 상생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갈등정도 : 해소기 (상생협력사례)-스스로 문제해결
- 갈등성격 :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 계룡산 주변지역 종교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거 환경이 훼손되는 등 집단 종교시설화를 막기 위한 주민들이 반발
- 계속 대규모 유사시설이 들어설 경우 자원의 한계 등으로 예상되는 환경파괴의 문제를 비롯해 지하수 부족 등을 우려하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함
- 지역주민은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확충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설이 계속 들어설 경우 계속 농사를 짓기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는 등 생존권 보장 차원으로 반발
- 과거 인근지역에 특정 종교단체 유사시설이 들어선 후 정서적, 도덕적 문제 등이 야기된 경험, 앞으로 종교시설 집단화 될 경우 지가하락 등 사유재산권 침해마저 우려

21

4. 상생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갈등의 문제 대부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근거 확보 및 이행 약속
- 상생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주민이 우려하는 특정 종교시설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 해결 방안

-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안 최종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적극 반영하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
- 지하수 부족 및 환경오염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22

4. 상생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집단 종교 시설화를 대비한 항구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 방안 마련
- 상호간 1차적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철저히 약속이행,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각서 논산시가 담보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준공 후 시설개방으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방 공간 활용

23

시사점

- 비전문가 중재 조정에 참여 실패, 불신 가중(전문가 의뢰)
- 지방자치단체 갈등전문가 양성 및 정책적 지원
- 지역포럼과 연계한 사전예방 및 조기해소를 위한 노력
- 지역포럼 또는 전문가와 연계시스템 구축
- 시군과 충남포럼과 유기적인 업무연계 및 지문
- 상생협력을 통한 민주적 방법에 의한 갈등해결 학습 역량 향상
 - 4건 중 2건 법적 해결 1건 법적 비화 가능성
- 갈등 조례제정으로 공공정책 갈등 지원 및 해결 능력 배양(갈등으로 행정지연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비선호시설 사업 착수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24